

5. 북한의 고위급 정치회담 제의와 남북관계 전망

□ 회담 제의의 내용과 특징

북한은 고위급 정치회담을 제의하면서 종전과 달리 우리 정부의 관심 분야를 주요 의제로 채택하였음. 특히 정부를 참여 대상으로 한 점이나 이산가족 문제를 제기한 점은 발전적 특징임

- (내용) 북한은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99. 2. 3.)'에서 하반기에 남북 고위급 정치회담 개최를 제의하였음
 - 북한은 ① '99년을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의 해'로 지정할 것을 정식 제의하면서 ②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남한의 대북 정책 기조로 명문화하고 ③ 하루빨리 당국 회담을 포함한 폭넓은 대화를 마련하자고 제의함
 - 협의될 주요 의제로는 ①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 대책을 비롯하여, ② 남북 교류 협력 문제와 ③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간의 당면 문제들을 제안하였음
- (특징) 정부 부문의 참여 및 수신 대상자의 확대, 이산가족 문제 거론 등 우리 측의 관심 의제를 상당 부분 반영하는 매우 발전적인 모습을 보임
 - 북한의 '정당·단체 연합회의'는 노동당, 사민당 등의 정당과 문예총,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의 각종 단체로 구성된 회의로서, 통일전선전술 차원에서 대남 창구 역할을 해왔음('48년 이래 약 50여 차례에 걸쳐 매년 1월말 경에 제의해옴)
 - 그러나 이번에는 정부를 포함하여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로 확대하였고, 대남 편지 수신 대상자를 정부 당국자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서울시장을 포함하여 150명으로 확대하였음('98년 70명)→ 이는 남한 당국자 배제 원칙의 완화를 의미
 - 수취인란에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으로 표기하여 '대한민국'을 공식 호칭한 점과 정치 회담 시기와 의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점 등도 발전적인 특징임
 - 또한, '99년 우리 정부의 중점 과제인 이산가족 문제를 제의한 점도 특징적임

□ 평가

이는 남북한 당국자 회담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대북 포용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화답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북한은 선행 조건의 이행을, 남한은 무조건적인 회담 재개를 요구하는 등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음

- (평가) 정치·선전 공세적 성격도 다분히 포함되어 있으나, 최근 미·일의 대북 강경 기류로 남한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증대되었고, 우리 정부의 일관된 대북 포용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대응으로 해석됨
 - 이번 제의가 연례 행사의 일환 및 남측의 당국자 회담 제의에 대한 사전 차단, 남한의 포용 정책에 대한 테스트 및 북미 회담을 앞둔 대미 협상용 제스처 등 북측의 '명분 쌓기'로 해석될 수도 있음
 - 그러나 북한은 집권 말기 클린턴 행정부의 정치력 약화와 미 공화당의 강력한 핵 사찰 요구, 미사일 발사 이후 일본의 냉담한 지원 반응 등으로 경제적 실리 확보 측면에서 남한과의 협상 및 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종전보다 증대되었음
 - 이번 제의는 미국이 페리보고서를 통해 종전보다 확대된 포괄협상이나 대북 고립책의 양자택일을 경고할 것이라는 보도 속에 나왔음(Wall Street Journal, '99.2.3)
 - 또한 당국자 회담 촉구와 대북 지원 방식의 변화 등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포용 정책에 대한 화답으로도 해석할 수 있음

- (입장차) 남북한 모두 종전보다는 다소 발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북한의 조건부 개최에 반해 남한의 무조건적 제의간에는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음
 - (북한) 대한민국 칭호와 구체적인 의제와 회담 시기 제시, 비난적 발언 자제, 우리측의 회담에 대한 긍정적 표시 등은 회담 재개에 대한 변화된 모습을 의미함
 - 그러나 전제 조건으로 외세와의 공조 파기 및 합동 군사 연습 중지, 국가보안법 철폐, 남한의 범민련과 한총련과 같은 이적 단체들의 통일 운동과 활동의 자유 보장 등을 제시하면서 상반기 내에 해결후 하반기에 회담 개최를 제의함
 - (남한) 북측의 제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아무런 조건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 당국간 회담 개최를 북측에 촉구하였음
 - '98년 4월(비료회담) 이후, 우리 정부는 중단된 당국자간 대화 채널 복구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공식·비공개 방식의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남북관계 전망

당국자간 회담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상반기에 정부가 분위기 조성을 위해 비료와 식량을 지원하고, 하반기에 총리나 각료급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음

- 남북 상호간의 이해 공유로 당국자간 회담 성사 가능성이 높아짐
 - 종전에도 북한은 전제 조건 이행없이 대화에 임한 경험이 있으며, 전제 조건 주장은 조건 충족 자체보다는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얻기 위한 전술로 해석됨
 - 따라서 북한의 경제적 실리 추구하고 남한의 당국간 채널 확보 및 평화 체제 유지라는 남북 상호간의 이해가 공유되면서 회담 성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
 - 더욱이 김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1. 4.)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의 주체적 해결 필요성 및 일괄타결을 강조한 점, 국민회의와 청와대(외교안보수석)가 냉전 구조 해체 차원에서 상반기내 국가보안법 개정을 시사한 점 등에서 당국자간 회담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엿볼 수 있음
 -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대북 정책 초점을 개별 현안과 당사자간 현안에 대한 분리 접근, 한반도 내의 근본적 안전 보장을 위해 '장기 포괄적 접근을 통한 냉전 구조 해체'에 두면서, 보다 적극적인 대북 포용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북한이 경제적 실리만을 얻은 채 당국자 회담이나 긴장 해소 등의 정치 현안을 뒤로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또한 정부는 제2의 잠수함 사건 발발시, 지속적인 포용 정책 실행에 대한 부담이 커지므로 북측의 태도 변화와 국민들의 지지 유도를 위한 언론 선도의 적극적인 대북 정책 홍보 전략이 요구됨
 - 정부는 회담 성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무급 차원이나 당국자간 회담과는 별도로 식량 및 비료, 농업 구조 개선 지원 등을 상반기 내에 먼저 추진한 후, 하반기에 당국자 회담을 총리 및 각료급의 형식으로 발전시켜나갈 가능성이 높음

- 회담이 성사되면 남북관계 및 경협 활성화 분위기 조성에 긍정적 영향 기대
 - 회담이 성사될 경우, 한반도 내의 상호 불가침과 군축 논의, 정전 체제의 평화 체제로의 전환,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정치·군사적 현안 문제 해결과 함께,
 - 경협 부문에서는 직교역 및 방북 기술자의 장기 체류 문제, 분쟁 조정 등 경협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이의 이행을 위한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의 운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예상됨

(홍 순 직 sjhong@hri.co.kr ☎724-4051)